

오늘의 주요기사

2023 2 7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01	[]		1
강원도민일보	01	[]		1
江原日報	03			2
강원도민일보	02			3
江原日報	04			3
 SBS			2	4
LG				5
江原日報	10A			6
江原日報	21		68	6
강원종합복지신문		IWPG		7
 세계뉴스통신				8
江原日報	03		“ ” vs “ ”	9
강원도민일보	01		4	10
강원도민일보	03		1 ' 86 가	11
강원도민일보	03		4 ' '	12
江原日報	01			13
江原日報	02		道,	14
강원도민일보				15
강원도민일보	07			16
江原日報	02		IOC	17
江原日報	01		' 1	18
강원도민일보	10			18
강원도민일보	04		... ' '	19
江原日報	01			19
강원도민일보	19		[]	20
강원도민일보	19		[]	21
江原日報	19		[]	22

江原日報

2023 02 07 ()
01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2023. 2. 7.-2. 16. (10일간)

- 신년연설 (도지사, 교육감)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사찰 등

강원도민일보

2023 02 07 ()
01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2023. 2. 7.-2. 16. (10일간)

- 신년연설 (도지사, 교육감)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사찰 등

江原日報

2023 02 07 ()
03

도의회 오늘 임시회 개최 올해 첫 의사 일정 돌입

도지사·교육감 신년 연설

강원도의회가 7일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올해 의사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진태 지사와 신경호 도교육감이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 도정과 교육 행정 추진 방향, 주요 시책 등을 설명한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올 4월 법안 통과가 기대됨에 따라 김진태 지사의 이번 신년 연설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도와 도의회의 협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시작으로 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회기 기간 21개 조례안이 심의·의결되고 ‘동서고속화(춘천~속초), 동해안북부선(강릉~제진) 적기 개통 및 역세권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처리된다. 최승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이와 함께 회기 기간 도청 실·국별 업무 보고와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된다. 경제산업위원회는 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지구 등을 방문, 현장시찰활동을 실시한다.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리고 1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정된다.

한편 임시회 개최에 앞서 6일 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는 도 특별자치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같은 날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를 찾아 특별자치도 교육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2 07 ()
02

도의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 심의 나서

도의회 개회 10일간 일정 돌입
도지사·교육감 신년연설 등 예정

강원도의회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심의에 나선다.

도의회(의장 권혁열)는 7일부터 오

는 16일까지 10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는 도지사와 교육감 신년연설(7일),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동해안북부선(강릉~제진) 적기개통 및 역세권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7일), 강원도립대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14일), 각 실·국별 2023년도 주요업

무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었다.

도의회는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최승순)을 비롯해 스토킹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 등의 근거를 담은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홍),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14세~34세 이하 청년의 지원 근거를 담은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원미희)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 02 07 ()
04

강원도대학포럼 특별자치도·고등교육 혁신 방안 논의

15일 도의회서 공동 개최
주제발표·종합토론 진행

강원도대학포럼이 15일 오후 2시 강원도의회에서 제5차 '상상과 속의 광장'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형 고등교육 혁신'을 주제로

개최되며, 강원도의회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형 고등교육 혁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신승춘 강릉원주대 명예교수는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도의 과제: 지역대학 살리기'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고, 김대건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장은 '강원도형

대학체제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 김경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명연 상지대 기획처장, 왕보현 강릉원주대 교수회장, 홍석민 한림대 기획처장이 참석한다. 박서화기자



강릉에 도청 2청사 개청 추진...규모 · 위치에 관심 쏠려



<앵커>

강원도가 강릉에 제2청사 건설을 추진하면서 규모와 위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7월에는 2청사를 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기자>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강릉에서 열린 강원도의회 의원총회에서 "강릉에 도청 2청사를 만들겠다"며 7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발언 이후 도청은 물론 강릉 지역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관심의 핵심은 어떤 실국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서 업무를 보느냐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2명인 지방 2급 자리를 하나 더 늘려 2청사에 본부장급 책임자를 두고, 현재 있는 환동해본부 외에 문화관광과 산업 관련 2개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규모는 시뮬레이션 중으로, 환동해본부는 가칭 해양수산국으로 변경해 지금 위치에 두고 추가되는 2개국 청사는 강원도립대학의 여유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환동해본부가 협소해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하고 있다"며, "직원 규모는 110명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2청사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이 먼저인 만큼, 3월 초까지 행정안전부와 2급 신설을 위한 협의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와 별개로 강원 특별자치도 법에 부지사 1명을 더 둘 수 있는 특례도 추진해, 법이 통과되면 부지사급을 2청사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동지역 주민들은 슬렁이고 있는 가운데, 장소나 규모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큼니다.

생색내기 이전보다는 큰 규모의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용남/강릉시의회 산업위원장 : 강릉시의 어느 부지가 됐든 간에 (제2청사의) 조직과 기능을 먼저 편성하고, 그 이후에 적절한 위치에 제2청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릉시는 도청 5개국 이상 이전과 부지사급 상주, 도 산하기관 동반 이전 등을 목표하고, 강원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영상취재 : 권순환 G1방송, CG : 이민석 G1방송)



LG

2023 02 06 ()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해제 '촉구'

최성식

지역 주민, "군사시설 탓에 개발 제한"

[앵커]

속초하면, 푸른 동해바다와 호수,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고층 빌딩숲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속초 북부지역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해 수십 년째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성식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안 관광 1번지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 속초시.

호수와 해안가에는 수십층 고층 건물과 고급 브랜드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마치 서울 도심이나 부산 해운대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속초항에서 북쪽으로 불과 1km 떨어진 북부지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기자: 속초시 영랑동 왕복 4차선 도로 주변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 탓에 벌써 30년 가까이 개발 제한이 이뤄지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1 IN] 속초와 고성 경계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로 인해 반경 2km 이내는 모두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 속초시 영랑동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CG1 OUT]

[CG2 IN] 해당 군사시설 특성상 고도 제한이 설정돼 있는데 800여 m 떨어진 곳이 17m, 2km 떨어진 건물도 높이가 약 70m에 불과합니다. [CG2 OUT]

더욱이 관련 법령에 해당 군사시설 2km 반경 내에서는 일정 세대 수 이상의 공동 주택이나 상업 시설 설치도 제한하고 있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정호 강원도의원: 군사시설로 인해서 지금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사동 지역 전체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한 목소리를 내신다고 봅니다. '군사시설을 옮겨라. 우리는 군사시설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볼 수 없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방부의 반대로 고도제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원도와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조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국방부장관에게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직접 건의하고,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 강원도지사 참여를 특례 조항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 문제는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군사시설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수십 년째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속초시 영랑동 시가지 모습

는 강원도의 정치권, 또 제주라든지, 세종, 전북 등 정치권과 협력해서 최대한 특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민원 등과 관련해 특례 조항 반영과 함께 정부 규제 혁신 과제로 제출하고 해당 부대 방문을 통해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tv뉴스 최성식입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수십 년째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속초시 영랑동 시가지 모습

최성식 choigo75@lghv.net

江原日報

2023 02 07 ()

10A



신북교 홍천사과연구회장 취임 홍천사과연구회는 최근 홍천농업기술센터에서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오홍수 홍천부군수, 최이경 홍천군의회 부의장, 이광재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이규대 회장 이임식과 제9대 신복교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江原日報

2023 02 07 ()

21



◇강대신문 창간 68주년 기념식 및 제45회 강대문화상 시상식이 6일 대학미래도서관에서 김대중 부총장, 송호필 강대신문동우회장, 문상석 주간교수, 박관희 도의원,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남덕기자

강대신문 68주년 기념식 ‘강대문화상’ 시상

강원대 신문방송사는 6일 춘천캠퍼스 미래도서관 정강홀에서 ‘강대신문 창간 68주년 기념식 및 제45회 강대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대중 교학부총장을 비롯해 전임 주간교수, 강대문화상 수상자와 강대신문 학생기자, 동우회원 등이 참석했고, 염지현 제77대 편집국장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제45회 강대문화상 시상식’에서는 소설·시·수필·평론·사진·웹툰 등 6개 부문의 수상자 10편이 상을 받았다.

김대중 부총장은 “앞으로도 대학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2023 02 06 ()

강원종합복지신문

IWPG춘천지부,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 진행

서영석 기자



[강원종합복지신문 서영석 기자]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춘천지부(지부장:박미인)는 최근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박기영 도의원, 동부노인복지관장과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IWPG 춘천지부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복지관 배식 봉사를 지난해 6월부터 다시 매주 금요일 꾸준히 하고 있다.

서영석 기자 webmaster@gwelfare.co.kr



대한민국 민영통신사 SEGYE NEWS TONGSIN

세계뉴스통신

2023 02 06 ()

홍천군 서석면번영회, 군민안녕 풍년기원제 개최

디지털편성부



홍천군 서석면번영회, 군민안녕 풍년기원제 개최

[세계뉴스통신 디지털편성부] 홍천군 서석면번영회는 6일 서석면 미약골에서 '2023 계묘년 군민안녕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홍성기 도의원, 나기호 군의원, 전상권 서석면장, 지역기관단체, 번영회원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편성부 segyeneews1@naver.com

江原日報

2023 02 07 ()
03

국힘 “이재명 방탄 집단 농성” vs “헌법 부정 독재적 발상” 민주

정권 규탄 장외투쟁 놓고
여야 강원도당 날 선 공방

속보=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6년 만에 개최한 장외 투쟁(본보 6일자 3면 보도)을 놓고 강원도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4일 열린 집회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이재명 방탄 집단 농성’에 불과하다”고 선공을 취했다. 이어 “정부의 민생 파탄을 주장하지만 최근의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인상을 미뤄 왔기 때문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범죄 사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6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당이 장외 집회를 반민주적, 반국가적인 집단 선동이라고 비난하는 주장은 집회의 자유를

인정 않고 헌법을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역공했다.

이어 “난방비 급등을 부른 국제 LNG 가격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하반기 가장 많이 올랐고 올겨울 난방비 폭탄은 예측 가능했지만 정부는 도리어 에너지 복지 예산을 400억원이나 깎았다”고 맞섰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 혐의가 공범들의 재판에서 명확해졌다”며 “국민의힘 도당은 야당인 민주당 비판에 올인하지 말고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윤희기자 jyh89@kwnews.co.kr

2023 02 07 ()

01

강원도민일보

환경·산림 4대 핵심규제 철폐 본격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발의

허영 대표발의 137개 조항 담아
강원도 제시 181개 조항 압축
심의 갈등 차단 사업 특례 삭제
4월 국회통과 목표 입법화 본격

속보=환경·산림·군사·농지 4대 핵심규제 개선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6일 국회에 제출,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입법 작업(본지 2월 6일자 3면)이 본격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도정지권을 포함해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새해, 도정지권의 '단체 1호 법안'이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당초 강원도가 181개 조항을 담아 마련했던 내용을 압축, 총 137개 본 조항·6개 부칙 조항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4대 핵심규제 개선 및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분권'이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사업 특례 등은 삭제 및 일부 조정했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커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삭제된 특례는 접경지역경제특구 조성,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 등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미래 모빌리티, 데이터 거점 조성 등 '전략산업·지역개발' 분야로 분류된 세부 특례 조항도 제외됐다.

4대 핵심규제 개선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 산림이용지구 지정 및 운영,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군사 부문은 민군복합단지 우선 조

성 및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 보호구역 거리완화 지정, 환경 부문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허영 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

의를 거쳐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의하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는 "초당적 협력에 나서준 여야 의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세훈

▶관련기사 3면

강원도민일보

2023 02 07 ()
03

도 정치권 ‘단체 1호 법안’ 여야 86명 협치 가동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발의

김 지사 ‘국회 네트워크’ 총동원

강원도 정치권의 2023년 ‘단체 1호 법안’으로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도정치권을 포함한 총 86명의 여야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전체 공동발의자 당적은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50명이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22명) 가운데 절반인 11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행안위 법안 1소위(9명) 소속의원만 5명이다. 특별법 전

부개정안의 행안위 심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소속의 경우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김남국·최강욱·전주혜 의원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 우상호·정성호·윤호중·김병주등도출신·연고의원들도 대거 동참했다.

특히, 허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조기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법안 발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당위성 및 동참을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그 결과, 여야의원들의 협치를 이끌어냈다. 또, 여권에선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도 이번 개정안에 동참했다.

이와관련, 도내 여당 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점과 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 ▶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 ▶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 ▶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 ▶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

- 허영 국회의원(대표발의)과 여야 의원 86명 공동발의
- 법안 전체 본조항 137조 부칙 6조로 구성

로나선 것은 여야 협치 차원의 입법 전략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며 가교역할을 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김진태 도지사 역시 ‘국회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3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협치를 보여준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세훈 sehoo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2 07 ()
03

도 강특법 개정안 4월 국회통과 목표 ‘총력전’

정부·여야 정치권 전방위 지원 요청

강원도가 정부와 여야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요청에 나선다. 김 지사는 6일 도청에서 가진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남은 4개월 동안 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6월 11일까지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부처 설득작업은 물론, 여야 지도부를 만나 특별히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시도지사가 모이는 자리를 통해 타 시도의 협조를 요청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면서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 등 의원들을 두루두루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강원도민일보를 방문, 강원도민TV와 영상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청정강원, 강원도는 미래를 위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그 틀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도 당장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 “당장 행복할 권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찾을 수 있다. 미룰 수 없는 미래산업을 지속가능하게 올인할

생각”이라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소개하며 김 지사는 “더 넓게 문을 열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과 기후변화 등 여러가지 전 지구적 이슈, 개방화, 자유화에 대한 의미를 담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가치와 비전을 담아 함께 살아 나갈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 특위(위원장 김길수)에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한편 김 지사는 내부 혼란과 지역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강릉 제2청사 설치와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정승환·이철화·김덕형

▶영상인터뷰 8일 업로드 kado.net

江原日報

2023 02 07 ()

01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행안위·법사위 심사 통과 총력전

여야 의원 86명 공동 발의

속보=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6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직접 제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 발의로 동참하면서 국회 심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제출한 전부개정안(본보 6일자 1면 보도)은 본조항 137조 부칙 6조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교육 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균형발전 차원을 위한 특례들이 눈길을 모은다. 폐광지역 내국인 카지노 총량제, 접경지역 군 급식 수의계약,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미활용 군용지 활용 등이 특례로 담기면서 규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8%에

달하는 86명이 공동 발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50명이다. 강원도 지역구 및 연고의 국회의원 10명은 공동 발의자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법안 심의 상임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사인 이만희(국민의힘), 김교흥(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전체 22명 중 절반인 11명이 참여했다. 김영주(민주당), 정우택(국민의힘) 등 국회부의장 2명도 찬성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민주당 허영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를 해주신 모든 국회의원께 깊이 감사 드리고 정부 부처와도 협의를 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3월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심의가 진행된다. 서울=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3 02 07 ()
02

道,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총력 쏟는다

정부 부처·여야 지도부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 계획

강원도가 6일 국회에 발의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 부처와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다.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를 만나 특별히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대표 발

의를 맡아 준 허영 국회의원과 여당에서 발 벗고 나서준 유상범 의원에게 감사 드리며 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현역 김기현, 윤상현, 안철수, 조경태 의원도 모두 발의에 힘을 보탤다.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는 23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이며 야당

지도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검토 중이다.

이날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세종시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2023 02 07 ()

강원도민일보

막판 협의 끝에 춘천 역점사업 특별자치도법 반영

이승은

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원 설립
허영 의원 발의안 제외, 재포함
같은 당 육 시장-허 의원 불통 지적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교육특구와 과학기술원 설립·연구개발특구 특례가 막판에 포함되면서 민선8기 춘천시 비전인 교육도시와 첨단지식산업도시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인 육동한 시장과 허영 의원 간 소통 부족했다는 의원실 내부 지적이 제기된 데다 춘천시 역시 “강원도와의 협의에 집중했다”고 밝히면서 육 시장과 허 의원 간의 관계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6일 본지 취재결과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와 다양한 학교의 설립 및 육성 등이 담긴 교육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조항이 담겼다.

연구개발 특구지정,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의 조문도 최종적으로 담기면서 첨단지식산업 도시 구현에도 속도가 붙게됐다.

앞서 두 특례의 경우 강원특별법 특례반영 법률 조문(안)에는 포함됐으나 허영 의원 발의안에는 두 특례가 제외되면서 시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가 마련한 181개 조항을 130여개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 특례’ 부분은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허영 의원실과 춘천시 모두 ‘소통 부족’을 인정했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춘천시와 소통이 적었다”고 했다. 지난 2일 육동한 시장은 관계 부서와 회의를 갖고 긴급대책 논의에 나섰다. 시 관계자들은 3일까지 허영 의원실 관계자들과 만나 춘천시 비전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강원도 특례다 보니 도와 의견을 많이 나눴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랴부랴 의원실과 소통해 당 위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원 설립이나 교육특구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화가 되지않았을 뿐 법안 내용으로 풀어낼 수 있게 포함이 돼있었다”며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으나 결국 직전에 내용이 포함됐으니 소통과정이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ssnnee@kado.net

2023 02 07 ()
07

강원도민일보

인구감소지역 향토자원 활용 기업 육성 추진

강원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심의
산업여건 취약 문제 해결 초점
매출 100억원 ↑ 업체 발굴 주력

강원도가 올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평창산양삼, 횡성더덕, 양구방짜유기·시래기 등 향토자원을 활용, 관련 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6일 춘천 세종호텔 소양홀에서 '2023년 강원지역산업 혁신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광열 도경제부지사, 홍경수 도경제진흥원장, 이기대 강원장조경제혁신센터장, 최진섭 스크립스코리아향체연구원장,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예상규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장, 김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등 혁신기관장 16명과 도관계자가 참석해 지역산업진흥계획



2023년 강원지역산업 혁신기관협의회(총괄위원회)가 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정광열 도경제부지사와 도내 혁신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와 강원테크노파크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육성 전략으로 지역연고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12개 시·군으로 대부분군 지역에 해당해 정주·산업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도는 도내 45개 농공단

지를 조성했으며 이중 인구 감소지역 시군 농공단지는 29곳(64.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운영 중인 지역특구는 9곳으로 지역연고자원을 기반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고자원 사업은 고성·홍천의 해양심층수 이용 농산물 가공, 영월 광물자원 활용, 횡

성·원주이모빌리티 부품생산, 철원바이오 퀀텀닷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생산 등이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출 100억원 이상의 성숙기업 육성에 나선다. 또한 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목표로 신규고용 263여명, 사업화매출액 533억 2000만원 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별 예산투자로는 R&D 120억 600만원, 비 R&D 66억 2700만원 등 총 204억 7300만원(국비 144억 4600만원, 지방비 60억 2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광열 부지사는 "올해 특별자치도 비전이첨단미래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도는 수도권에 비해 경제가 강한 편이 아니다. 한순간에 경제강화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지만 다양한 지원·전략 설정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선우·김덕형

IOC 오늘부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실사

9일까지 진행... 조정위 회의도 함께 열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대회 경기장 실사를 포함한 제3차 IOC 조정위원회 회의를 7~9일 강릉 스카이베이호텔 및 개최 도시인 강릉, 횡성, 평창, 정선에서 진행한다.

회의는 메뉴 실사 및 본회의로 나눠 이뤄진다. 7~8일 이틀간 오전에는 강릉, 횡성, 평창, 정선 내에 위치한 경기장 시설 및 선수촌

실사를, 오후에는 로잔 IOC 본부와 화상 연결을 통해 본회의를 개최한다.

△재정·인력 △대회 마스터플랜 및 수송, 숙박, 식음료 등을 망라한 대회 종합 서비스 △지역 청소년 참여 등 문화행사 △선수촌 및 NOC 서비스 등 대회 준비와 관련된 주요 의제를 총망라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IOC 조정위원회는 IOC를 대표

해 각 조직위와 함께 대회 준비를 점검하고 협의하는 기구로 강원 2024 조직위와는 연례 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왔다.

이번 조정위원회는 최초 대면 회의로 장홍 IOC 조정위원장을 포함해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국장 등 조정위원 전원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을 포함한 개최 도시 시·군 관계자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이무현기자 trustme@

2023 02 07 ()
01

江原日報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투자기업 유치

도·원주시 ‘美에 본사 둔 글로벌 반도체기업’과 내달 투자협약
83억원 투입 원주 공장 증설·추가 고용... 도 기업 유치 박차

속보=강원도와 원주시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체에 성공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반도체 기업 유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원도와 원주시의 사실상 1호 투자 유치 성공 사례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다음 달 원주 반도체교육센터 개소식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전자재료 종합 솔루션 기업과

1호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기업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반도체 튜브와 밸브를 생산, 전 세계에 판매하는 글로벌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는 수원에 한국사무소가 있고 화성과 안성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원주 동화농공단지에 도 종업원 105명 규모의 공장을 이미 운영 중인 이 기업은 이번 투자협약 후

83억원을 새롭게 투입해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추가 고용에 나설 계획이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번 투자 유치 성사를 기점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초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과 인프라를 갖춰가는 초기 단계임을 감안, 본격적인 기업 및 투자유치는 2025년 이후로 판단했던 강원도는 1호 투자기업 유치 성공에 따라 적극적인 원주 마케팅에 나서기로 방향을 바꿨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전국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

해 강원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홍보한다. 또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대상 기업으로 압축한 대기업 16곳, 중견기업 60곳, 중소기업 870곳 등 총 1,046개 기업(본보 1월27일자 1면 보도)에 대해서도 접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도는 향후 이들 기업을 일일이 방문해 투자 유체에 나서고 이전 시 최대 16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200억원의 국비를 토대로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갈 반도체교육센터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도 박차

를 가해 유치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키워나간다는 것이 원주시와 강원도의 목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원주 공장 증설을 결정한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튜브, 밸브 공급 업체 중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도 “다양한 반도체 기업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며 향후 강원도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2023 02 07 ()
10

강원도민일보

시 경찰 수사 알고도 의암호 협약 추진 논란

경찰, 지난달 시에 수사 통보
시, 2일 오후까지도 일정 진행
“재검토 과정에서 문제 발견”해명
국힘·정의당 비판 성명 잇따라

속보=4000억원 규모의 더레이크 춘천 복합리조트 사업이 경찰 수사망(본지 2월6일자 12면)에 오르면서 시청 안팎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더욱이 춘천시가 경찰의 수사를 인지한 상황에서 실시협약(MOA) 체결을 하루 앞두고 이를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자 육동한 시장의 신뢰도도 직격탄을 맞았다. 당장 춘천시의회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해당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정 이래 최대 규모 사업인 의암호 개발 협약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이날 의암호 개발 협약을 둘러싼 경찰 조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의 자료요구에 협조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민선8기 출범 이후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전임시정을 포함해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경찰이 춘천시에 수사협조의뢰를 통보한 시기가 지난달로 알려지면서 춘천시가 이달 초까지 해당 협약을 강행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2일까지만 해도 3일 더레이크 춘천 복합리조트 사업 MOA를 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일 오전 민주당과의 회의에서도 육동한 시장은 MOA 체결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당일 오후 4시쯤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3일 MOA체결을 공식화했으나 1시간 만에 이를 돌연 철회했다. 하지만 강원경찰청이 춘천시에 수사협조의뢰를 통보한 시기는 지난 1월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를 인지한 상황에서 춘천시가 MOA를 추진했다 이를 하루 앞두고 철회하면서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사협조의뢰를 받고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경찰 수사와 MOA는 별개의 일이다. 춘천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상

황”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춘천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춘천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공모를 요청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춘천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마리나 사업은 졸속행정의 표본이 돼버린 만큼 춘천시장은 여기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강원도당 역시 “육동한 춘천시장은 문제가 많아 지속하기 어려운 의암호 마리나·관광사업을 그만 포기하고, 협약 연기에 대한 사유 및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현·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 02 07 ()

04

중국발 스모그 초미세먼지 공습 ... 영동지역 '산불 주의'

봄철 건조주의보 위험 최고조

입춘이 지나자 중국발 스모그로 인한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영동 건조주의 보도 이어져 봄철 화재 위험도 최고조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6일 도내 초미세먼지(PM-2.5)농도는 '나쁨'(36 $\mu\text{g}/\text{m}^3$ ~75 $\mu\text{g}/\text{m}^3$) 수치를 보이면서 회색빛 하늘이 계속됐다.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76 $\mu\text{g}/\text{m}^3$ 이상)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 초미세먼지 일 최대 농도는 원주 명륜동이 96 $\mu\text{g}/\text{m}^3$ 로 매우 나쁨 수치를 뛰어넘는 농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횡성 87 $\mu\text{g}/\text{m}^3$, 홍천 84 $\mu\text{g}/\text{m}^3$, 화천 80 $\mu\text{g}/\text{m}^3$, 횡성 79 $\mu\text{g}/\text{m}^3$ 등으로도 내 대부분 지역이 한때 '매우 나쁨' 수치를 기록했다.

미세먼지(PM-10) 수치도 정선이

143 $\mu\text{g}/\text{m}^3$ 로 151 $\mu\text{g}/\text{m}^3$ 이상일때 예보되는 '매우 나쁨'에 근접했고 원주 반곡동(122 $\mu\text{g}/\text{m}^3$), 홍천(101 $\mu\text{g}/\text{m}^3$) 등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치를 보였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국발 스모그로 인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아졌다. 7일까지 도내 영서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치를 유지할 전망이다.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영동 남부에는 건조 경보가, 영동 중·북부와 남부 산지 일대에는 건조주의보가 지속되면서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

신재훈 ericjh@kado.net

江原日報

2023 02 07 ()

01

이른 봄날씨속 미세먼지의 습격

춘천 9도·원주 10도 포근 동해안·산지 등 건조특보

7일 강원도내 한파는 한풀 꺾이겠으나 영서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수치가 이어지겠다.

이에 따라 영서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영동지역의 경우 '보통' 수준으로, 6일 '나

쁨' 수준에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춘천 9도, 원주 10도, 강릉 8도를 기록,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1~6도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다.

동해안과 남부산지, 정선평지와

중·북부산지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8일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오겠으며, 영동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김준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2 07 ()
/ 19

강원특수교육원 조기 결정을

-춘천·원주·강릉 유치전 과열, 갈등만 증폭

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강원특수교육원 유치전에 춘천·원주·강릉 지역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입지조건과 교육환경의 장점을 내세우며 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교육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지역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따라 입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특수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유치전은 과열 양상을 보여도민들의 우려가 큼니다. 입지 결정이 늦어질수록 경쟁이 치열해 지역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가능한 한 빨리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은 장애 학생 등 교육약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진로 체험과 직업교육을 실시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게 합니다. 나아가 왕성한 사회 활동을 펼쳐 지역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할 인재로 성장시키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교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 학생 인권 보호 등이 종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2층과 3층 규모의 2개동(또는 5층 이상

1개동)으로 특수교육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특수교육원이, 유치 경쟁으로 인해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3' 도시인 춘천·원주·강릉이 유치전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의 주장은 나름대로 논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도청 소재지라는 점과 춘천 시내에 특수학교가 3곳이 있어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설치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학생수가 가장 많고, 인프라가 잘 조성된 원주가 특수교육원 본원 설치 지역으로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영동, 그중에서도 강릉에 특수교육원 본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지역마다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뜨거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전이 강원을 대표하는 도시들의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됩니다. 부지 결정이 늦어질수록 과열 양상이 심화할 것입니다. 특수교육원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규모를 줄여 분산 건립하는 방안을 포함해 도교육청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07 ()
/ 19

국회 통과 전방위 대응으로 결실얻어야

-1차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미비점 적극 보완하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월 6일 발의와 동시에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50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우호적 분위기는 조성됐습니다. 여야 의원 86명이 발의에 참여한 데다가 논쟁이 될만한 조항은 줄였다고 밝히고 있어 법안 심사는 원만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급한 현안이나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접경지와 폐광지 활성화방책이 포함됐습니다. 군사규제 지역에서 민군복합단지 조성 우선 및 민간인통제선·제한보호구역 거리를 완화해 지정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를 담았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가가 우선 구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폐석으로 취급돼온 경석을 광물자원으로 인정해 에너지산업으로 이어지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지역형 과학기술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 강원과학기술원 및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강원도 면적의 대부분인 산림과 농지는 물론 국방과 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보호 규제 조치 관련 결정 권한을 중앙부처 장관에

서 강원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과 강원도는 초당적이고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범주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지와 산림, 환경, 국방분야는 강원도 발전에 있어서 일방향적인 걸림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정하게 유지 관리해온 산림과 환경은 관광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직 대체 산업이 뚜렷하지 않은 접경지 시군에서는 군부대 규모 정도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국가적 관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내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년층 역시 일자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투자를 확대하며 수출 등에서 결실을 본 의료정밀기기 및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육성책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장관에서 강원도지사로 이양된 막대한 권한을 도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조치도 분명해야 하는 만큼 강원도는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접경지 규제개혁,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을 비롯, 강원도 전역은 남북 분단에 따른 통일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도 보상은커녕 늘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총면적은 8,097km²로 남한 면적의 8% 정도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접경지역 총면적의 약 64%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접경지역은 국가 방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비접경지역이 번영을 누리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과 서비스를 무한 제공해 오고 있다.

접경지역과 그 주민들은 국가 안보상 필요에 따른 다양한 규제와 제약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에 제공되는 국가적 지원은 빈약해 비

접경지역은 사실상 국방서비스에 무임승차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은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주민 이주를 확대하는 정도의 안보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 의존해 왔다. 2000년 들어 비로소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 법에 따라 DMZ 생태환경과 관광계획을 수립, 관련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기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제약을 넘지 못해 지원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난 3일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국방 분야 특례에 대해 논의한 것에 큰 기대를 건다. 김 지사와 이 장관은 이날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 하에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의논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을 도에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포함된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 공공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우선 매각 허용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의 필요성을 양측이 공감했다.

이제는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

군납 수의계약 유지·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김진태 지사·이종섭 국방장관, 현안 논의

지원 기준, 인구수 아닌 면적 반영해야 할 때

다. 같은 접경지역으로서 같은 국방서비스를 생산하지만 경기도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보다 2~3배나 많다. 강원도 접경지역사업의 추진은 부진하다. 원인은 지원이 면적이 아닌 인구 기준으로 이뤄지고 그마저도 군인과 같은 비통계인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비 지원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지립도가 매우 낮은 강원도로서는 국방서비스의 보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접경지역 정책에서는 접적 면적이 인구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국방서비스의 담보는 매칭 펀드식 논리로 성립될 수 없으며 규제는 군사적이 아닌 통일 정책의 차원에서 다루는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江原日報

2023 02 07 ()
/ 19

연료비 1년 새 31.7% 급등, 서민 교통 경감 대책은

연료비 상승 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뛴 데다 연료비마저 폭등해 서민층 물가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다. 연료 물가는 전기료, 도시가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지역난방비, 부탄가스 등 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들의 물가 동향을 보여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1월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연료비 상승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물가도 고평행진을 펼치는 양상이다.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취약층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는 1년 새 30% 넘게 치솟았다. 실제 고물가·고금리·난방비 폭탄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서민들의 한숨이 넘쳐나고 있다. 연료비 폭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과 함께 서민 및 자영업자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급증이 우려

된다. 농·어업인도 마찬가지다. 비닐하우스·화훼농가와 양식어민들은 농사와 조업 포기로 생산기반 붕괴마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기름 값과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돼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20%의 식품, 주거, 난방, 교통 등 필수 생계비는 가처분 소득의 93%에 이른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허리띠조차 없는 취약층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더 두텁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방비 폭등 사태를 맞아 대책을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장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취약계층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의 인상이 줄 이어 체감 물가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과 대상 확대, 그리고 재원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연료비 급등에 따른 종합적인 서민 교통 경감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기를 바란다.